

충남리포트 제141호

ChungNam Report

2014. 11. 26.

한·중 FTA에 따른 충남 수산업의 위기와 기회

김종화

충남발전연구원 농촌농업연구부 책임연구원, sdart@cdi.re.kr

본 연구는 한·중 FTA의 실질적 타결을 계기로 수산분야의 타결내용과 위기·기회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대응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음.

요 약

- 2014년 11월 10일 한·중 FTA가 실질적으로 타결됨. 충남 대표 수산물의 대부분은 초민감 또는 민감품목으로 분류되어 발효 이후 당분간은 큰 영향이 없으나, 장기적으로 중국 수산물의 수입물량 증가와 관세철폐 등으로 직·간접적인 영향이 예상됨.
- 중국 불법조업에 따른 “불법어획물”에 대한 특혜관세 부여 불가 입장에 따라 주요 불법어획물을 초민감품목에 포함시켜 양허제외, 부분감축, TRQ 등으로 대응함.
- 중국이 김, 해삼, 미역, 전복, 넙치 등의 품목에 대하여 자유화를 100%로 즉시 관세철폐 또는 10년 내 조기철폐를 양허했기 때문에 중국시장의 개방 폭이 확대되었음.
- 대응방안으로 「대 중국 수출 전략품목 육성」, 「어촌소득의 다양화」, 「어업·어촌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통한 대 중국 수출확대와 어업·어촌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제시함.
- 한·중 FTA가 단순한 수산물 통상의 의미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어업·어촌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요구하고, 향후 자유무역협상(한-ASEAN, TPPAP 등)에서 선례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어업 또는 어촌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CONTENTS

〈요 약〉

1. 들어가며
2. 수산분야 타결내용
3. 충남 수산업의 위기와 기회
4. 충남의 대응방안

- 2014년 11월 10일 한·중 FTA가 실질적으로 타결되면서 수산업 분야에서도 그에 따른 국내 수산물 시장에서의 품목별 파급 및 어업·어촌의 구조적 변화를 초래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와 걱정, 기대가 교차하고 있음.
 - 중국은 우리나라와 인접해 있어 생산되는 수산물 품목이 같고, 지리적으로 가까워 신선한 수산물을 손쉽게 교역할 수 있음.
 - 그러나 대부분의 중국산 수산물이 값싼 인건비를 바탕으로 한국보다 저가에 유통되고 있어, FTA 체결로 인해 국내산 수산물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 한편, 김, 해삼, 전복 등 일부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이 품질우위에 있으며, 이를 통한 대 중국 수출물량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음.

- 특히, 충남은 중국과 서해안을 맞대고 있고 갯벌어업이 성행하여 중국 수입 수산물과 교차되는 품목이 많아, 그에 따른 영향관계가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음. 그러나 한편으로는 김, 해삼, 전복, 갯벌참굴 등 수산물 생산에 적합한 천혜의 해양생태환경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통한 대 중국 수출물량 확대와 시장개척을 기대해 볼 수 있음.

- 이에, 근간에 타결된 한·중 FTA에서 수산업 분야를 집중으로 검토하고, 그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여 충남 수산업의 위기와 기회 요인을 짚어보고자 함. 또한 위기와 기회 요인분석을 통하여 한·중 FTA에 대한 충남의 대응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전반적으로 수산업 분야에서는 한·중 FTA로 인해 국내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었던 품목이 초민감 또는 민감품목으로 선정되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산 수산물 수입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국내 20대 생산품목(오징어, 넙치, 멸치, 갈치, 김, 고등어, 꽃게 전복, 조기 등)이 대부분 초민감품목에 포함
 - 농어, 돔, 민어, 뱀장어 등 조정관세품목과 대게, 소라, 전갱이, 홍어 등 자원관리품목 대부분도 초민감품목에 포함
- 기존의 타 FTA와 비교해 볼 때 낮은 수준으로 개방하여 수산업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였으며, 특히 중국 수산물 시장의 자유화율 100%를 끌어 내 우리 수산물의 대 중국 수출확대 가능성이 커짐.
 - 김, 미역, 넙치, 전복, 해삼 등 62개 대 중국 주요 수출품목의 대부분이 즉시 관세철폐 또는 10년 내 철폐로 조기 개방
- 중국 불법조업에 따른 “불법어획물”에 대한 특혜관세 부여 불가 입장에 따라 주요 불법 어획물을 초민감품목에 포함시켜 양허제외, 부분감축, TRQ²⁾ 등으로 대응함.
 - 양허제외: 조기(냉동), 갈치(냉동), 넙치(냉동), 넙치(활), 홍어(냉동), 돔(냉동), 멸치(건조), 고등어(냉동), 가자미(냉동) 등

1)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한·중 FTA 협상 실질적 타결”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2) TRQ(Tariff Rate Quota): 저율관세수입물량,

- 부분감축: 꽃게(냉동) ※ 관세 1% 감축하여 기존 14%에서 13.86%로 전환
- TRQ(저율관세수입물량): 아귀(냉장, 냉동) ※ 물량의 10%만 부여

● 이와 같은 FTA 타결내용을 바탕으로 충남 주요 수산물의 영향관계를 살펴보면 다음 [표 1]과 같음.

- 중국의 불법조업과 관련하여 넙치, 멸치 등의 어류가 양허제외되어 관련 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임. FTA 영향보다는 불법어업에 따른 자원감소가 더 큰 위협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바지락은 현재에도 대 중국 수입액이 32,232천 달러이며 수입물량 전부가 중국산으로 TRQ 대상품목으로 선정되었으나, 향후 저율관세에 따라 일정의 수입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굴과 김은 부분감축 품목으로 분류되어 제한적 감축(2% 이내)이 있을 것으로 보여 수입량 증가가 예상되나 큰 폭의 시장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
- 꽃게는 활어와 냉장은 양허제외 품목이고, 냉동은 부분감축 품목으로 냉동꽃게의 수입량은 증가할 수 있으나 꽃게시장 전체의 영향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낙지는 대 중국수입액이 106,807천 달러이며 전체 수입액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80.8%로 TRQ 대상품목으로 선정되었으나, 향후 저율관세에 따라 일정의 수입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표 1] 한·중 FTA에 따른 대 충남 수산물의 영향

품목	타결내용	영향
멸치	(건) 양허제외 품목으로 현 관세 유지	시장에 큰 영향 없음
넙치	(활, 냉동) 양허제외 품목으로 현 관세 유지	시장에 큰 영향 없음
바지락	(활, 냉장, 냉동) TRQ 대상품목을 일정량을 저율관세로 수입	현재도 중국 수입량이 많은 품목이며, 향후 수입량 증가 예상
굴	(냉장, 염장) 부분감축 품목으로 분류되어 관세감축	현재 약 20%수준이나 향후 2%이내에서 관세 감축
김	(조미, 건조) 부분감축 품목으로 분류되어 관세감축	현재 10~20%대의 수준이나 향후 약 2%이내에서 관세 감축
꽃게	(활, 냉장) 양허 제외 (냉동) 부분감축 품목으로 분류되어 관세감축	(냉동)현재 14% 수준이나 향후 약 1% 내에서 관세 감축되어 13.86% 예상
낙지	(활, 냉장, 냉동) TRQ 대상품목을 일정량을 저율관세로 수입	중국 수입량 증가 예상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한·중 FTA 협상 실질적 타결”, 2014.11.10를 참고하여 작성

- 현재 타결내용이 공개된 충남 수산물의 경우 대부분 초민감품목, 민감품목으로 선정되어 일정부분의 수입량 증가는 예상되지만, 양허제외, TRQ, 부분감축 등의 조치를 통해 큰 폭의 시장개방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충남 수산업의 위기와 기회 ◀

03

- 충남 대표 수산물이 대부분 초민감품목으로 분류되어 TRQ나 부분감축의 조치대상이고, 민간품목으로 분류되어 발효이후에도 당분간 가격경쟁력 저하, 중국산 수산물의 물량공세에 의한 시장경쟁력 약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장기적 시점에서 볼 때, 전반적인 중국 수산물의 수입량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유통물량이 확대되어 국내산 수산물의 가격경쟁력 약화 및 시장가격하락이 예상됨.
 - 특히, 바지락, 낙지의 경우에는 TRQ 조치에 따른 저율관세로 인해 전반적인 시장가격하락이 예상되며 그에 따른 국내산 바지락, 낙지의 가격하락이 예상됨. 또한 자원감소 및 높은 인건비로 바지락과 낙지어가의 경영적자가 초래될 수 있음.
- 한편, 중국 수산물의 자유화율 100%(즉시 또는 10년 내 관세 철폐)로 완전 개방되는 품목으로는 김, 해삼, 미역, 전복, 넙치 등이 있음. 이 중, 김과 해삼은 대표적인 충남 수산물로 향후 대 중국 주요 수출품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임.

[표 2] 한·중 FTA에 따른 대 중국 수출 기대 품목 현황(2012년)

품목	전국 생산량 (톤)	전국대비 충남 생산량 비중(%)	전국 생산액 (억원)	전국 대비 충남 생산액 비중(%)	중국 수입액 (만달러)	수입시장 점유율 (%)	자급률 (%)	관세율 (%)	대중국 수입증가율 (%)
김	349,862	5.77%	2,775	6.5%	23	44.0%	95.7%	10~20%	-72.9%
해삼	1,935	21.71%	243	21.4%	1.6	31.7%	107.0%	20%	-99.0%

자료: 김종화, “한·중 FTA에 따른 어업분야 영향 및 대책”, 충남발전연구원 현안과제, 2013.

- 또한, 타결내용상 김과 해삼은 각각 초민감품목(부분감축)과 민감품목으로 분류되었고, 대 중국 수입증가율이 높지 않아, 한·중 FTA에 따른 국내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김, 해삼에 대한 전략적 육성을 통해 충남의 주요 수출 수산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전략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충남은 중국의 청도(靑島), 상해(上海), 연태(烟台), 위해(威海) 등 연안도시와 서해안을 끼고 마주보고 있어 이들 도시에 대한 전략적 공략이 가능함.
 - 이들 도시는 연안에 위치하여 전통적으로 주민들이 수산물을 활용한 식습관을 갖고 있어 수산물 소비가 가능한 지역임.(※ 중국 내륙지역은 수산물 소비가 거의 없음)
 - 충남 연안바다와 어장환경 및 연안생태계가 중국의 동북지역과 동일하여 생산되는 수산물 품종이 같으므로 충남 수산물에 대한 중국 국민의 거부감이 없을 것임.

- 한·중 FTA 타결에 따른 충남의 대응방안은 「대 중국 수출전략품목 육성」, 「어촌소득의 다양화」, 「어업·어촌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거론할 수 있음.

- 첫째, 「대 중국 수출전략품목 육성」전략이 필요함. FTA는 우리나라만 일방적으로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국 또한 시장을 개방해야 함. 특히, 금번 한·중 FTA에서는 김, 해삼, 미역, 전복, 넙치 등 62개 주요 품목 대부분이 즉시 철폐 또는 10년 내 조기철폐되므로 김, 해삼, 전복 등을 대 중국 수출의 전략품목으로 육성해야 함.
 - 중국산 수산물과 비교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품질우위전략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중국 부유층을 표적으로 하는 고급화 전략이 필요함.
 - 김은 서천과 홍성, 보령을 있는 지역 네트워크형 산업으로 육성하고, 전복은 태안, 해삼은 보령을 중심으로 특화시켜 대 중국 수출을 위한 전진기지로 삼아야 함. 그리고 주력수출품목은 단순한 생물 및 가공품 생산이 아닌 한류문화 콘텐츠와 결합하여 한국 수산물 식문화, 식생활을 전파하는 매개체로서 활용해야 함.
 - 또한, 국내 시장에서 경합하게 될 품목도 품질경쟁력과 시장대응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목별 생산조직 육성, 계획생산 및 유통시스템 구축 등의 노력이 필요함.

- 둘째, 「어촌소득의 다양화」를 통한 어업외 소득의 발굴·확대가 필요함. 한·중 FTA 등 시장개방 압력과 수산자원 감소로 어업인의 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그에 따라 어업생산소득뿐만 아니라 어업외 소득원도 적극 발굴하여 어업인의 지속가능한 소득창출을 위한 정책지원이 필요함.
 - 어촌의 생태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한 어촌체험마을, 수산물 가공공장 및 직매장 등 어촌

6차산업화, 해양레저산업 육성 등 어업의 소득 창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셋째, 「어업·어촌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하여 어업인의 어업·어촌 이탈요인을 제거하고 적극적인 인구유입정책을 통한 어업인구 유지 또는 증가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

- 정주 및 복지여건 개선을 통한 어업인 삶의 질 향상, 귀어·귀촌의 적극적인 장려를 통한 어촌 유입인구 증대, 수산자원의 관리·회복 노력을 통한 해양생태계 복원 및 어업인 소득원 확보 등의 노력이 필요함.

● 이외에도, 한·중 FTA에 대응하고 수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대응이 필요함.

- 불법어업을 자행하는 일부 중국어선에 대한 적극적이고 적절한 대응, 한·중 FTA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어가에 대한 피해보전직불제 시행, 장·단기적으로 관세가 철폐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에 대한 지속적인 시장모니터링 실시 등이 요구됨.

● 한편, 현재 한·중 FTA는 “실질적 타결”이라는 용어를 통해 공식 선언되었으나, 세부 기술적인 사안 협의 및 협정문 법률 검토, 협정문에 대한 가서명(initialing)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 따라서 아직 세부품목까지 타결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으나, 해당 지자체와 어업인이 조속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세부품목까지 정보가 공개되어야 함.

- 특히, 충남의 특화 수산물인 주꾸미, 전복, 전어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관련 대응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역별 특화수산물에 대한 정보공개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함.



김 종 화 책임연구원

충남발전연구원 농촌농업연구부

041-840-1128, sdart@cdi.re.kr

◆ 참고 자료 ◆

김종화(2013), “한·중 FTA에 따른 어업분야 영향 및 대책”, 충남발전연구원 현안과제.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계부처 합동보도자료(2014), 한·중 FTA 협상 “실질적 타결 -한·중 정상회담 (11.10)에서 공식선언”.

2014년도 충남리포트

구분	제 목	집필자	발행일
2014-01	동아시아 철새 보전, 서천갯벌에 달렸다	정옥식	2014.01.01
2014-02	통합브랜드 구축으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인다	이충훈	2014.01.09
2014-03	충남의 협동조합, 정체성을 높이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송두범	2014.01.21
2014-04	이제! 유역주민이 참여하는 물자치 시대이다	이상진	2014.01.27
2014-05	활력 넘치는 전통시장 되살리기, 상품권 사용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민정	2014.01.28
2014-06	조류인플루엔자(AI) 관리 대책, 예방이 최우선이다!	정옥식	2014.02.11
2014-07	지원·참여형 문화소외계층 정책으로 충남형 문화복지시책을 추진하자	이인배	2014.02.13
2014-08	FTA를 수출확대의 기회로 삼아야	김양중	2014.02.20
2014-09	사라지는 농촌마을! 한계(限界)마을정책 도입해야	조영재	2014.02.25
2014-10	2014년 충남경제 전망과 시사점	김양중	2014.02.28
2014-11	다기능농업을 활성화하자	이관률·정현희	2014.03.06
2014-12	충청남도 벤처기업 현황과 발전방안	임형빈	2014.03.13
2014-13	충남 고령자 교통안전 대책이 필요하다	김원철	2014.03.27
2014-14	충남형 주민자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최병학	2014.04.03
2014-15	충남의 행복지표와 정책 연계 방안이 필요하다	고승희	2014.04.16
2014-16	충남 논·밭의 생물상 및 생물다양성 증진 방안	정옥식	2014.05.08
2014-17	2040년 읍면동 인구 추계로 본 충남의 정책과제	임준홍·홍성호	2014.05.15
2014-18	내포광역도시권 형성을 위한 지역간 연계·협력 추진 방안	오명택·김정연	2014.06.12
2014-19	충남의 미래 성장을 견인할 자동차부품산업	김양중	2014.06.19
2014-20	민선6기 충남도 및 기초자치단체 당선자 공약 분석	송두범	2014.06.24
2014-21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수철	2014.07.14
2014-22	지역을 위한 농협 혁신 성공 전략	이호중	2014.07.16
2014-23	대등하고 협력적인 중앙지방간 재정관계 정립을 위한 제도개선	이정만·고승희	2014.07.17
2014-24	충남 보육정책 진단과 공공성 강화 방안	최은희	2014.07.21
2014-25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의 기술도약을 위한 정책과제	김양중	2014.07.23
2014-26	충남 협동조합의 조직화와 공급생태계 조성의 필요성	장종익	2014.07.28
2014-27	충청남도 자기주도 행정체계의 지속적 관리방안	주운현	2014.07.30
2014-28	충남 정책 키워드(3농혁신, 사회적경제)의 SNS 데이터 분석	임화진	2014.07.31
2014-29	프란치스코 교황의 충남 방문 의미와 향후 과제	유병덕·최영화	2014.08.05
2014-30	충남 자동차부품기업 기술개발 지원제도의 개선방안	김양중	2014.08.07
2014-31	내포지역의 정체성 정립과 추진과제	박철희	2014.08.11
2014-32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전략 모색과 민선6기 충남의 발전 방향	김찬규 외	2014.08.21
2014-33	지방 3.0 시대, 충남 재정정보공개의 의미와 과제	정창수	2014.09.11
2014-34	분권형 초광역자치의 필요성과 과제	김순은	2014.09.16
2014-35	충남경제의 선순환을 위해 분공장 경제 탈피가 필요하다	박 경	2014.09.18
2014-36	충남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벤처투자금융 활성화 방안	김홍기	2014.09.23
2014-37	충청남도 행복기움지원단 활성화 방향과 과제	김용현	2014.09.25
2014-38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발전등급제 도입과 지역별 차등지원 방안 제안	변창흠	2014.09.30
2014-39	충청남도 주민자치를 위한 동네거버넌스 실천과 전략	안성호·곽현근	2014.10.02
2014-40	지역 중심의 에너지시스템 전환을 위한 정책과제	이상현 외	2014.10.08
2014-41	충남의 산업단지, 공공디자인으로 새롭게 변신해야 한다	이충훈	2014.10.16
2014-42	충청남도과 중국 허베이성(河北省) 간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박경철	2014.10.17
2014-43	농촌의 에너지자립, 산림바이오매스에서 찾다: 일본 산림구원대 활동	박춘섭	2014.10.30
2014-44	일본 내발적 발전의 도시형 사례와 시사점	이민정	2014.11.06
2014-45	충남 지역 현실이 반영된 교통수요분석 DB 구축과 관리 필요	김형철·김원철	2014.11.12
2014-46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의 이해와 도입방안	김원철·유준일	2014.11.20
2014-47	한중 FTA가 충남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김양중	2014.11.26
2014-48	한중 FTA 타결에 따른 충남 농업의 위기와 기회	강마야	2014.11.26

■ 충남발전연구원 홈페이지(www.cdi.re.kr)에서 쉽게 볼 수 있으며, 인용시 출처를 정확히 밝혀주세요!

■ 본 연구보고서는 충남발전연구원의 자체보고서로 발간된 것이며, 충남도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